

“이번엔 신한은행” 또 터진 은행권 채용비리

검찰조사 통해 ‘필터링 컷’으로 조직적 비리 진행 사실 뒤늦게 밝혀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출신교 구별 차단 ‘차별금지법 도입’ 시급” 주장

최근 청년층 취업준비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있는 ‘은행권 채용비리’ 사태가 일파 만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신한은행에서 이 같은 사실이 또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전 인사부장 등 신한은행 관계자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른바 ‘필터링 컷’을 통해 조직적 채용비리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은행은 2013~2016년 기간 학점과 연령 등을 조작해 기준 미달인 지원자를 심사 없이 바로 탈락시키는 ‘필터링 컷’을 시행, 국회의원과 유력 재력가·금융감독원 직원 자녀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합격 여부를 결정했다.

학점의 경우 서울대 등 최상위대 출신은 3.0 이상이었으나 지방대는 3.5를 넘겨야 했다. 연령 면에선 남성(군필자)은 28세~29세인 데 반해, 여성은 26세~27세를 넘기면 서류전형 대상조차 될 수 없었다.

이 같은 소위 ‘필터링 컷’ 대상자라 하더라도 국회의원 자녀 등 ‘유력자’가 청탁한 지원자의 경우 서류심사는 물론, 1차 실무자 면접, 2차 임원 면접 역시 통과했다.

신한은행에선 이들 유력자 자녀를 ‘특이사항’, ‘부서장 명단’이란 이름을 붙여 별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신한은행은 2016년도 하반기엔 남녀 합격자 비율을 3대 1로 인위적으로 설정, 합격 점수 미달인 지원자 48명에 대한 임원 면접 점수를 조작해 남성 32명을 추가로 합격시키기도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성명을 내어 최근 하나은행에 이어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태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은행권의 낮은 문제의식을 비판하는 한편, 특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걱세는 “기업들이 문제의식 없이 암암리에 학력·출신학교에 따른 우대·배제·구별을 적용해 왔음에도 이를 저지할 근거는 매우 부족하다”며 “상위법인 고용정책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학력·출신학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 있지만, 역시 처벌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출신학교 차별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시급히



최근 금융권 채용비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신한은행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위키백과갈무리 제공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출신학교 채용비리 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과 관련해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학력차별금지 및 기회균등보장에 관한 법률안’(김혜영 의원 대표발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학

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강길부 의원 대표발의)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심상정 대표발의) 등 총 5건이 발의된 상태다.

김영서 기자 ys97kim@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

새로운 시작, 대전으로 오세요

2019 대전 방문의 해

2019 대전 방문의 해

대전이 좋다

대전국제외인메이
경제산 휴양림
유성온천
유성온천 문화축제
계곡산 별밭축제
대청호 오메리길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 선포식 (2018. 12),
- 대전역 야시장 (2019. 5)
- 뮤직 페스티벌 (2019. 7),
- 한국관광학회 국제학술대회 (2019. 7)

네이버·카카오 의료산업 진출에 거센 반발

시민사회,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우려... 정부 각성 촉구

국내 대표적 IT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의료사업 진출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의료정보의 상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폭증한 의료 빅데이터 사업 규모 대비 크게 미흡한 국내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먼저 네이버의 경우 클라우드 사업 확장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비해 관련 보안 인증인 의료정보보호시스템(ISO27799)을 업계 최초로 획득했다.

또 네이버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해 ICT 첨단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빅데이터 연구 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분당서울대병원과 대웅제약과 손을 맞잡았다. 조인트 벤처 설립을 통해 헬스케어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는 투자전문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와 현대중공업지주, 서울아산병원 등과 함께 의료 빅데이터 확보를 위한 전문회사 설립에 나선 상태다.

이들 3사는 ‘아산카카오메디칼’을 총 100억 원을 출자해 설립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의뢰정보 및 자문을, 카카오는 의료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제공을 각각 맡게 된다.

이런 가운데 이들 ‘공통 IT 기업’의 의료산업 진출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보건의료단체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자료를 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정책과 맞물려 재벌병원과 기업 간 유착으로 개인의료정보를 활용한 돈벌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최근 언론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완화 정책에는 유출 시 매우 큰 개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환자와 시민들의 개인질병 정보와 의뢰정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재 과기정통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질병정보 및 의료 기록을 민간기업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정책으로 기업들이 개인의료정보를 수집·가공·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산업자원부는 아주대병원 등 39개 대형병원들에 있는 5000만 명분의 전자의료기록(EMR)을 민간병원과 기업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환자 전자의료기록은 진료의 목적 사용이 금지돼 있음에도 환자들에게 고지나 동의 없이 39개 병원장들의 동의만으로 관련 사업이 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서 기자



최근 IT 기업의 의료산업 진출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내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픽사베이 제공